

OPINION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데스크 칼럼

박정렬

지역사회부장



3월과 함께 봄 소식을 알리는 봄꽃 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남쪽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봄철 지나칠 수 없는 콘텐츠다.

“2025 섬 흥매화축제” 지난 6일부터 4일간 신안 1004섬 톨립흥매화정원에서 열렸고, 전남의 대표적 봄꽃 축제인 광양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광양매화마을에서 열다’를 주제로 지난 7일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개막해 1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오는 15일에는 노란 산수유꽃의 장관이 펼쳐지는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열리고, 신안 섬 수선화축제,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등 봄꽃과 지역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봄 축제 특유의 활기참과 화사한 풍경들은 겨우내 찬바람과 추위에 위축돼 있던 상춘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하지만 올해 축제는 예전과 조금은 다른 풍경이다. 기

남도의 봄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

후변화로 인한 봄꽃 만개 시기가 들쭉날쭉하면서 축제 개막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봄꽃이 화사한 웃음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화 시기가 예측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정확한 개화 시기를 가능하게 어려워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이 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도사리며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민의 가슴속에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군 헬기가 국회에 군 병력을 실어 나르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보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위기의 순간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신속히 대응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이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며 제2, 제3의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를 잠재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 직후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지지세력들의 불법 난동사태가 발생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됐다.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측 변호인과 대통령의 지리한 변론이 거듭될수록 답답함은 쌓여갔다.

전국민이 지켜본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을 아무일이 아

닌 해프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통령측의 말들은 육두문자를 내뱉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급기야 지난 8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다시 불안감을 심어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아 한다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선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에도 나서지 않고, 내부 진통 속에서도 구속취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했다.

일련의 과정은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떠올리게 한다.

답답함이 일상을 다시 장악했다. 속을 뿔 뿔이 풀 사이다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남도의 봄을 만끽하고 축제를 즐기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기고

김유빈

(사)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주 이사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겨울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봄이 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요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일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장갑차를 막아내고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 전 국민이 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각적으로 불법 계엄 반대 집회가 열렸고 ‘응원봉’ 집회 시위 문화와 이를 주도하는 청년층의 관심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응원봉 집회의 OST가 돼 전국에 울려 퍼졌다. 나는 여기서 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가?

비단 매스컴뿐만이 아니다. 부상하는 2030 청년의 새로운 활동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자도 보였다. 그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히며, 나는 이를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모두가 주목하는 2030 여성은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2018년 해화역 시위가 그랬고 몇 년간의 낙태죄 폐지 운동이 그랬다. 대통령 탄핵 집회 건반 비교해 보더라도 2016~

예견된 성별 갈등, 공존을 찾아가야 할 때

2017년 광화문에는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새겨진 것만이 군중 속에 함께했었다. 귀어문화축제가 개최되면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며 춤추고 행진했다. 광장의 응원봉이, 남태령의 연대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다. 그간 듣지 않고 보지 않던 이들의 목소리와 지력을 이제야 확인한 것뿐이다. 나와 같이 여성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양한 곳에 칼럼을 썼으니 확인해 보길 권한다.

이와 반대의 상황도 존재한다. ‘그들’이 계속해서 애국 보수 청년이라고 칭하는 이들의 폭력적인 행보이다.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사유와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나 이가 법원 난동, 백골단의 부활 등의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덧붙여 불법 계엄 반대 의견을 밝힌 여고생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뒤져 외부 품평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것 역시 놀랄까나 새롭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혐오를 표심의 전략으로 활용하며 이를 유효하게 만들었다. 2024년 ‘숯맛’ 여성이라는 사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SNS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성착취 카르텔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정책 토론에만 개선했다. 사회는 이미 ‘애국 보수 청년’의 폭력성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매스컴은 ‘응원봉을 든 여성 청년’과 ‘하얀 헬멧을 쓴 남산 청년’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 갈등은 끝없이 심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요원해 보이기도 하다. 해서 여당 주요 인사들도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모든 당의 후보자들은 성별 갈라치기를 조정하는 정책이나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인 ‘양성’의 대결 구도가 지속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세 번째 탄핵 사태를 맞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사실 선명하다. 다양한 색과 모양의 응원봉처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가 그것이다. 이 글에서도 호명되는 ‘양성’을 중심으로 기재했으나 성평등한 사회는 더 넓은 스펙트럼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 3·8여성의 날에 또 외치며,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하게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라는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랫말처럼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추운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았던 모든 동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짧은 글을 마친다.

독자투고

학교폭력 사회적 관심이 절실

우리 기성세대가 단정하는 학교 폭력과 달리 요즘 가해 학생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 장난이 도를 넘어 조직화되고 잔인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얼마 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급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피해 경험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에 가장 취약한 어린 나이에 폭력으로부터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학교 폭력 양상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보다 심리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변종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폭력문제에 대해 무관심, 무관심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학생들 간 폭력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난이라고 해도 사소한 폭력이나 따돌림도 결국 학교 폭력이고, 피해자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먼저 인식하는 자세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해 충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김덕형 전남 장성경찰청 무주계장

취재수첩

전남은 의대가 필요하다

이현규

정부부 부장대우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다.

전남은 의료 인력 배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응급실이나 중증 진료 시설을 찾기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남 주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전남도민들의 30년 남은 숙원 사업이다.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전남에서 교육받은 의료 인력이 전남에 정착해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 의료 시스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가 전남 의대 신설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의대 정

원에 신규 정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남은 사실상 의사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사회는 전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모집인원 3058명이 발표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개교를 목표로 온 힘을 다해 왔다.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없다면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신설 문제를 다시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으로 원점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하고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정부가 2024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등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13개월 여만에 일단 불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남 통합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두 대학은 전남도가 정부에 통합의대 추진서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정식 제출한 상태다.

또 내년 3월 의대 개교를 위해선 최종 마감시한인 올해 4월까지의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돼 증원이 아예 없을 경우 이들 대학은 신설에 따른 ‘별도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들 두 대학은 임정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남의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정원 증원 논란과 의대 신설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의대신설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비율은 전국 1위이지만 과과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체인 전남에 의대신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 예술단 광주 이전 환영...차질없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내년 광주로 이전한다고 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문화한국 2035’에 따라 서울예술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한국 2035’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를 새로운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역 문화 균형과 세계문화 선도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문화비전을 담았다.

문체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공연 격차 해소와 지역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모델을 단계적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계획대로 이전될 경우 단체 이름을 서울예술단에서 국립아시아예술단(가칭)으로 바뀌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네트워크를 활용, 각국 예술가들과 국제교류, 인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레퍼토리 공연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예술단은 1985년 9월 남북예술공연단 교환공연 이후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 한국적 소재의 창작 가무극 등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잃어버린 얼굴 1895’, ‘윤동주, 달을 쏘다’, ‘신과 함께-저승편’ 등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이 이전할 경우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특화공연 콘텐츠를 제작, 지역 대표 공연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서울예술단이 그동안 총행에 성공한 다양한 작품 레퍼토리를 보유한 만큼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예술가 및 단체들과 협업으로 지역문화 역량이 강화되는 등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원들과 기존 관객들의 반발 등 이전 추진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는 국회 및 지역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10	논 설 실	370-7060		
우편번호 61234	경 제 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교 육 부 370-7030	임 원 실	370-7000		
팩스 (062) 385-5400	지 역 사 회 부 370-7040	총 무 실	370-7093		
	문 화 체 육 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